

“의총 필요” “구속력 없어”...통합 선언해도 성사까진 먼 길

국민의당 운명의 한 주...이번엔 통합절차 놓고 격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통합반대파의 움직임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통합반대파들은 ‘합당을 위한 의원총회 결의가 전제조건’이라는 주장을 들고나오며 통합 시도에 제동을 걸 태세를 보였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당헌당규상 통합에 의원총회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은 통합절차를 놓고서도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에 나선 양상이다.

통합반대파이자 호남 중진들의 모임인 평화개혁연대 소속 일부 의원들은 18일 조찬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조배숙·장병완·유성엽·박준영 정정숙 의원 등이 참석, 통합절차로 의원총회가 필수 조건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적변경은 중대한 문제로, 통합 관련한 의총 결의는 불문법과 같다”며 “당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오는 수요일(20일)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면서 “김 원내대표도 소집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구두로 받았지만, 대화가 먼저인 만큼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에 반대하는 초선들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의원) 소속으로 전당대회 의장이기도 한 이상돈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 안전을 최고위

평화개혁연대 조찬 회동

안대표 강원도 당원 간담회

21일 호남 포럼 유승민 참석

에서 당무위에 회부하기 전에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당적에 변화가 생기는 정당의 합당, 해산의 경우는 의원총회를 거치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불문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대표 측은 “의원총회는 원내 관련 사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는 곳으로, 당 관련 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헌·당규상 통합절차는 의총과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당대회를 통해 통합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안 대표가 전당대회 절차를, 통합반대파가 의원총회 사전 동의를 각각 강조하는 것은 양측간 통합 논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분석된다.

안 대표와 통합반대파는 이날도 세움이 경쟁이 벌어졌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당원간담회를 한 데 이어 19일 대전·충남·충북 당원간담회를 끝으로 강원도당에서 당원간담회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현재 제주도 방문 여부도 추가로 타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는 21일 호남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통합포럼 행사에 안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같이 참석하기로 했다.



18일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출근길 내린 눈과 외부 일정 등으로 이태우 최고위원(오른쪽 세번째)만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대응해 평화개혁연대도 19일 전북 전주에서 토론회를 하고 20일에는 국회에서 원외 지역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며 세 확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1일로 예정된 순환규 상임고문의 귀국이 이번 사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군 당심·민심 잡기 ‘5대5 셈법’ 분주

후보경선, 여론조사·권리당원 50%씩 반영 가닥 경선룰 간소화...당 조직력 여부에 전략도 달라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룰을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조사 각 50%씩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각 후보군들은 향후 경선 전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전략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전남 지역정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고위 전략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경선규칙으로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조사 50%에 의견을 모았다.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은 50%이하, 일반 유권자는 50% 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원 참여율은 최대치이고, 일반 유권자 참여율은 최소화시킨 셈이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인 안

심번호를 활용해 진행하고, 권리당원 조사는 해당 선거지역에 거주하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지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거 여론조사, 배심원, 당원을 3:3:4 비율로 적용하는 등 세분화시켰던 경선룰을 최대한 간소화해 룰을 둘러싼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내년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은 당내에서는 당원 관리와 당 외적으로는 여론조사를 위한 지지율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향후 선거전에서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지지율 조사에서 어떤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확장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권리당원의 경우 그동안 각 후보별로 최대한의 조직을 동원해 모집한 만큼 이들 권리당원 관리에도 상당한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권리당원 모집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지거나 당내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후보들은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 지지율 높이기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향후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등에서 경선룰의 5대5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군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장 입후보 예정자 측 한 관계자는 “경선룰이 당심과 민심 5대5 비율이 될 것으로 대다수 후보들이 짐작했었을 것이다”면서 “따라서 당내 기반을 다지면서 권리당원 관리와 함께 정책토론회와 SNS 등을 통한 시민 여론전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통합 강행맨 탈당 등 집단행동 나서겠다”

국민의당 광주·전남 시·도의원들 통합 논의 중단 촉구

국민의당 소속 광주·전남 시·도의원들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 강행 시에는 탈당이나 호남권 지방의원 간 연대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당 전남도당은 18일 도당 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따른 분열과 갈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인화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추승용·황주홍·윤영일·이우주·최도자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빨리 종지부를 찍고 선거체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일부 도의원은 “연말까지 가시적인 변화가 없으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간담회 직후 도의원들은 자체 회의를 갖고 ▲통합 논의 즉각 중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당명을 포함한 당의 전면적 쇄신 ▲지방선거 대책 추진 등 4가지 요구조건을 확정, 이를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장일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느긋하겠지만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멸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당이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면 광주, 전북 지방의원들과 연대 행동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지난주

모임에서 전체 의원 9명 중 8명이 통합 반대 뜻을 재차 확인했다. 시의원들은 “지역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원칙에 관한 문제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때가 된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탈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들의 격한 반발 움직임에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다독이는 등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화 전남도당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호남을 큰 기반으로 삼고 있고, 이는 도의원, 시·군의원들이 바탕이다. 중앙당도 호남권 시·도의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다같이 힘을 합쳐 당을 지키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oangrok.com

광주일보 65주년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ongi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ongi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ongi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되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병 사용량 제17조(2)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미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190ml 이상 1,000ml 미만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인상 전] → [인상 후]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